

「지방세기본법」에 의한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다.
일부 처분을 제외하고 심판청구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, 이때
의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며, 행정심판은 아니다(제89~91조).

2. 제587면 ②항 마지막 줄에 추가함

~~ 비판이 제기되었다. 그런데 2019. 4. 16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“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”라고 신설함으로써(제62조의4 제1항),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.

3. 제903면 ‘(나) ①’ 본문 3줄에 추가함

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‘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
부터 10년 이내에’ 부분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이에
대한 적용중지를 명하였다(2020.11.29. 2019헌바131). 따라서 현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
‘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’ 부분만 적용된다.

4. 102면 행정기본법 제38조 제2항 삭제함

- 국회의결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으나, 최종 의결에서 제외됨

